인문연구 제90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0, No. 1, pp.65~94
http://dx.doi.org/10.21211/JHUM.90.3

대학생 담론을 통해 본 1960년대 『사상계』의 담론 지형 변화

이시성*

〈차 례〉

1. 서론
2. 낭만적 혁명의 상상력과 대학생 표상
3. '정치'의 외연을 둘러싼 각축
4. 투쟁적 주체로의 변모와 좌절이라는 언어
5. 결론을 대신하여 : 『사상계』, 그 너머의 미래

【국문초록】

『사상계』는 60년대 지식장을 형성하고 또 주도하며 다양한 담론을 생산해냈다. 그중 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대학생 담론은 대학생에 대한 집단 표상을 만들어 그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체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60년대 전체에 걸쳐 『사상계』와 대학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관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계가 일방적인 영향 관계에 그치지 않고 상호교섭과 연대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집중하여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사상계』의 담론 지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해온 만큼 이 작업은 『사상계』가 4월혁명, 민주당 정권기의 통일운동, 6·3항쟁, 그리고 삼선개헌과 같은 사건들에 반응하여 어떤 담론을 생산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론 생산에 차원에 그치지 않는 실천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제어: 사상계, 대학생 담론, 학생운동, 4월혁명, 통일운동, 중립화통일론, 6·3항쟁, 민족적 민주주의

1. 서론

『사상계』는 1950~60년대의 지식인 담론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잡지다. 교수와 언론인, 그리고 각계의 지식인들이 글을 썼고, 그 독자는 대부분 식자층이었다. 당대의 엘리트 계층에 속하던 대학생 역시 주요 독자였는데 이들은 1960년 4월혁명을 경과하며 『사상계』가 발굴해낸 하나의 청년 표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독자였다. 50년대까지만 해도 향락과 퇴폐에 빠져있던, 신세대라는 집단으로 포괄적으로 묶이던 이들이 '대학생'이라는 구체적인 집단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에는 당대의 언론 매체들의 역할이 지대했고, 특히나 『사상계』는 가장 앞장서서 대학생을 새로운 세대의 주도적 집단으로 호명했다.

4월혁명 직후 『사상계』를 비롯한 당대 매체들이 대학생 담론을 어떻게 구성했나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이 여럿 있는데,

기존 논의들은 『사상계』와 대학생 세력의 관계를 담론 생산 주체와 그 대상으로 파악하여 『사상계』가 대학생 세력에 미친 영향관계를 위주로 살펴는 경향이 있었다.[1] 특히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에 논의를 집중시킨 유창민의 논문은 당시 대학생을 상대로 기성세대가 동원한 다양한 호명의 전략을 분석·분류하고 있어 흥미롭지만 일방적인 호명에 의해 대학생이 타자화 된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어 1960년대 중반 이후 대학생 세력의 성장을 설명하기 힘들게 한다.

이 시기 대학생은 지식인 주도의 '옆에서의 혁명'을 함께 수행할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호명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 대학생 담론은 '정치적 역할'이 기대되는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당대의 청년담론이나 지식인 담론과 겹쳐지면서도 조금씩 차이를 가지며 구성되었고,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에는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성 지식인들의 기대감의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 담론임에도 그 언설의 주체가 대학생이 아니었기에 대학생의 실제적인 요구와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막상 실질적인 힘을 갖춘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대학생들이 자주 기성세대가 마련한 윤리적·정치적 기준을 넘어섬으로써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사상계』는 이러한 갈등을 단순한 알력 다툼으로 소비하

---

1)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0집, 2010;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 제9권, 2010; 김미란, 「'순수'한 청년들의 '평화' 시위와 오염된 정치 공간의 정화 : 4월혁명기에 선호된 어휘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1집, 2011; 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 :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47호, 2011 등이 있다.

는 대신 지면 위로 끌고 들어와 학생운동 세력과 각축을 벌이기도 하고, 또 연대하기도 하며 60년대 담론장을 구성해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론을 만드는 위치에 있던 『사상계』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었던 대학생들에게 도리어 영향을 받기도 했고, 대학생이 직접 언설의 주체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사상계』와 대학생 세력은 일방적인 영향관계가 아닌 상호교섭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갔고, 이 과정에서 『사상계』는 기존의 입장이나 의견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그 담론 지형의 변화 양상 자체는 『사상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도 지적되었지만[2] 본고는 그러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보완하는 한편, 실천과 운동의 측면에서 앞서 있던 대학생 세력과의 길항 관계에 집중하여 그 변화 양상을 살폈다. 이를 통해 1960년대에 『사상계』가 실천적·저항적 정치 영역과 접목하게 되면서 어떠한 담론 지형의 변화를 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2. 낭만적 혁명의 상상력과 대학생 표상

1950년대에 『사상계』에서 '신세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은 청년세대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것이었지 대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당시 대학생 표상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건방지고 책임감 없는, 향락과 퇴폐에 빠진 존재로 묘사되었고, 『사상

2) 장세진, 「'시민'의 텔로스(telos)와 1960년대 중반 『사상계』의 변전 : 6·3 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제38호, 2013; 김려실, 「『사상계』 지식인의 한일협정 인식과 반대운동의 논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4권, 2015 참고.

계』는 이들을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에 물든 세대로 규정했다. 50년대에 전인적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대학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지만 대학이 징병기피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면서 병역기피자의 소굴이라는 악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각종 관제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많아 대학생은 주체적인 의사를 지닌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상계』는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계도할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글을 마무리하곤 했다.

이러한 평가가 완전히 역전된 것은 4월혁명 이후이다. 혁명 후 처음 발행된 60년 6월 '민중의 승리 기념호'에서는 대학생들을 '혁명 전사' 또는 '노한 사자'로 지칭하며 기성세대가 아닌 이들에게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가능성을 찾는다. 대학생들도 자신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노한 사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좌담회에는 4월혁명의 주역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접 혁명의 동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들은 혁명이 단순히 3·15부정선거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12년간 축적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항거였다며 해방 후 실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교육에서 자신들의 혁명정신의 원천을 찾았다.[3] 4월혁명이 우발적으로 터져 나왔기에 학생들의 행동이 "'사상' 이전의 거의 본능적인 반항"[4]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그 바탕에 자유민주주의적 의제가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때문에 『사상계』 역시 이들을 주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용감한 기수"[5]로 호명했다.

---

3) 김승태 외 13인, 「노한 사자들의 증언」, 『사상계』, 1960년 6월호, p. 54.
4) 고병익, 「'혁명'에서 '운동'으로」, 『사상계』, 1960년 6월호, p. 118.
5) 안병욱, 「'이'의 세대 '의'의 세대」, 『사상계』, 1960년 6월호, p. 105.

그런데 '전사'와 '사자'라는 명명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당시 『사상계』 지면에서 대학생을 재현하는 방식은 다소 감상적이었다. 이념적·역사적 평가를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4.19는 마치 기적과도 같이 터져 나온 초유의 자발성이었고, 어떤 환멸도 겪지 않은 순결한 젊은이들의 사건이었으며, 한 점 균열 없이 황홀할 만큼 일체화된 공동의 경험"이었던 만큼 "시성(詩性)의 궤도"를 벗어나기란 어려웠다.[6] 때문에 4월혁명 직후에는 시가 유독 많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시라는 장르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대학생 주체를 형상화하는 방식 자체가 시적인 감상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나 죽음과 희생이라는 주제와 결부될 때 그러한 감상성은 극대화되었다.

대학생의 죽음과 희생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된 것 중 하나는 '피'의 표상이었다. 4월혁명 직후 발표된 「사월혁명에 붙이는 시 집」[7]의 시편들에서는 '붉은 선혈', '피불', '피외침', '피꽃잎' 등 '피'라는 시어가 반복·변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의 표상은 이처럼 시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었지만 학생 수기와 신문기사, 논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의의 아성에 대하여 피와 죽음으로써 결정적 일격"을 가했다든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제단 앞에 뿌려진 젊은 생명의 많은 고귀한 피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얻었다는 등 시적인 어휘와 표현들로 대학생을 상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8] 소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4월혁명 서사들은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세대 갈등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도 피의 표상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

6) 권보드래, 앞의 논문, 2010, p. 87.
7) 「사월혁명에 붙이는 시집」, 『사상계』, 1960년 6월호, pp. 344-357.
8) 안병욱, 앞의 논문, p. 99.

「대열속에서」의 '명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를 이룬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혁명에 참여한다. 그에게 그 행위는 타성에 물든 자기극복을 뜻했다. 그러나 대열 속에서 아버지로 인해 가족을 잃은 '창수'를 발견한 그는 기득권에 속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대열로부터 이탈할 위기에 처한다. 갈등하던 그가 혁명의 대열 속에 완전히 편입된 것은 경찰의 총탄에 맞은 창수를 감싸며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다. "두 젊은이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마치 한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나처럼 한데 엉켜 흐르고 있었다"[9]고 묘사되는 이 장면에서 명서는 목숨을 내건 희생을 통해 자기 한계를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한데 엉켜 흐르는' 피를 통해 세대와 계급까지 아우르는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낸다.

피의 표상은 "부패와 오염을 정화한다는 혁명에 대한 상상력이 피의 정화 능력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등장한 것인 만큼 그 자체가 '정화'를 의미했다. 나아가 '피'는 민족의 표상이기도 한만큼 세대와 계급을 뛰어넘어 전 국민을 일체감으로 묶고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재생케 하는" 것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기도 했다.[10] 이처럼 피의 표상은 정화라는 혁명의 본질에 맞닿아있는 한편, 민족 전체의 재생이라는 혁명의 목적과도 쉽게 결부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널리 활용되었다.

또한, 피의 표상은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학생-희생양 표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학생-희생양 표상은 그 자체로 혁명과 저항정신의 상징이 되어 혁명을 위해 희생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부채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60년대 반독재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미완의 혁명이 완성될 가능성을 끊임없이 독자대중에게 환기"

9) 한무숙, 「대열 속에서」, 『사상계』, 1961년 11월 특별증간호, p. 119.
10) 김미란, 앞의 논문, 2011, p. 199.

시키는 역할을 했다.[11] 시간이 흐르며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혁명에 대한 낭만적 수사는 힘을 잃어갔지만, 그와 비례하여 혁명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졌기에 학생-희생양 표상의 역할은 커져갔다. 『사상계』 역시 매년 4월 학생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답'을 지식인의 책무로 상기시키곤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생은 혁명 주체로 명명되며 혁명 담론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은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집단도 아니었고,[12] 혁명 초기 주도 세력도 아니었다.[13] 혁명 주체로서의 대학생 표상은 담론적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것이었다. 즉 혁명 직후 『사상계』에 드러난 대학생 표상은 실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4월혁명이라는 사건이 만들어낸 상상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하층빈민과 여성, 그리고 어린 소년들은 혁명 담론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사상계』가 혁명에 참여했던 여러 주체들 중 유독 대학생에 집중했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에 대한 『사상계』의 열망과 관련 있다. 『사상계』는 창간 이후부터 탈냉전 독자 노선과 극우 반공주의 모두를 경계하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를 지향했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을 통한 근대화가 그 길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겉으로만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울 뿐 오히려 극우 반공

---

11) 김려실, 「화보로 읽는/보는 『사상계』 : 1960년대 『사상계』와 혁명의 망탈리테」,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57집, 2019, p. 42.

12) 4월혁명 당시 희생자의 직업 분포를 따졌을 때 대학생 희생자 수는 22명으로 하층노동자(61명)나 고교생(36명), 무직자(33명)보다 적다.(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4, p. 247.)

13) 4월혁명을 초기부터 주도한 것은 중고등학생으로 오히려 대학생은 "4·19 마지막 국면에야 등장했고, 4월 26일 이후에는 오히려 4·19가 계속 사건화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권보드래, 앞의 논문, 2010, p. 98.)

주의로 향해가는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그 지향이 충족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4월혁명은 한국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혁명 이후 『사상계』는 이 사건을 '시민혁명'으로 명명하곤 했다. 서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발전도상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시민혁명의 한국적 기원을 4월혁명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혁명을 발전, 확대시켜나갈 책무가 지식인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혁명이란 사회의 중간계층을 구성하는 시민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밑으로부터의 주체 세력도, 유능하고 성실한 정부도 부재한 후진국 사회에서 개혁의 추진 세력으로 기대되는 것은 지식인 계층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는 '옆에서의 혁명'은 『사상계』에 있어 서구와 같은 방식으로는 근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콤플렉스를 우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다.

이 시기 대학생은 그 같은 지식인 주도의 혁명을 함께 수행할 신진 세대로 호명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생 표상은 『사상계』 지식인들이 청년세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표상은 어디까지나 표상으로 이것은 실제 대학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혁명 주체로서의 대학생 표상에서 부각되는 것은 불의에 대한 항거로 죽음까지 불사하는 희생정신,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도 물들지 않은 정치적 순수성이었다. 그러나 대학생 역시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를 지닌 집단이었고, 이로 인해 혁명 직후부터 기성 지식인과 대학생은 충돌하기 시작한다.

3. '정치'의 외연을 둘러싼 각축

혁명 직후 학생들은 빠르게 학원으로 돌아가 질서를 되찾으려 했지만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각종 학내외의 계몽운동에 참여했고, 일부는 쌓여있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자 기성세대는 학생들의 활동이 사회적 무질서를 불러일으킨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일부 학생들의 망동에 대해서 사회인들은 환멸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학생들의 '망동'으로 가장 경계된 것은 "정치적 색채를 농후히 가지고 있는 데모"를 하는 것,[14] 즉 현실 정치와 연결되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정향되는 것이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혁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사상계』 지식인들도 동의했으나 그들이 지향한 변혁은 법과 제도의 합법적인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학생들이 비상시적 방법인 데모를 동원하거나, 제도 정치권 밖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했다.

이것은 대학생들을 혁명 주체로 명명하며 찬사를 보냈던 태도와는 모순되는데, 대학생의 정치 활동에 대해 이 같은 양가적 반응이 나온 것은 새롭게 등장한 학생 세력의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탓이다. 『사상계』에서도 글마다 '정치' 참여, '사회' 참여, '현실' 참여 등으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다르게 지칭했는데, 이것은 대학생의 정치 참여에 있어 '정치'의 외연에 대해 정확한 합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와중에 대학생의 정치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준거는 4월혁명 이후 만들어진 대학생 표상으로, 희생과 순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생 표상을 통해 기성세대가 상상한 대학생의

14) 「국내의 움직임」, 『사상계』, 1960년 7월호, pp. 119-122.

사회정치적 책무는 매우 제한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일 수밖에 없었다.[15]

신생활운동과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반응이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계몽운동들이 기본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사상계』지식인들은 공명선거의 보장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과제만큼이나 그 제도를 수행할 투표 참여자로서의 대중의 역량 증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16] 선거계몽이 주된 내용이었던 농촌계몽운동에의 참여는 적극 권장되었다. 학생들도 계몽운동을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타파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민중들에게 혁명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

이처럼 혁명정신의 확산은『사상계』지식인과 학생의 공통의 관심사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지향과 방식에 있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사상계』지식인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확립과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를 추구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4월혁명이 열어준 담론적 광장의 지평을 협소화하는 길이었다. 반면, 학생들의 계몽운동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후진성의 근본원인이 분단에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몽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해결책은 통일, 그것도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냉전' 너머의 모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17]

그 이전까지 통일담론은 자유당 정권에 의해 독점되었고 북진통

15) 김미란, 앞의 논문, 2011, p. 190.
16) 이상록,「『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79.
17) 권보드래,「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회,『상허학보』제34집, 2012, p. 288.

일이 아닌 모든 통일담론은 용공시되었다. 그러나 4월혁명은 통일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담론적 장을 열어주었으며, 그렇게 열린 것은 이전보다 훨씬 개방된 광장이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있음을 자각한 학생들은 외세 배격과 자주 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남북 분단의 책임을 묻는 비미비소(非美非蘇)의 탈냉전적 인식에 기반한 중립화통일론과 남북협상론과 같은 통일담론을 수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운동조직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1960년 11월 18일 결성된 서울대의 '민족통일연맹'(약칭 민통련)은 첫 학생 통일운동조직이었다. 이들은 조직을 확대했고, 전국적 조직을 갖춘 민통련은 1961년 5월 3일 드디어 대의원대회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고, 5일에는 이를 추진할 18개 대학 민통련의 연합인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약칭 민통전학련)을 결성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새로운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일부 혁신계는 환영하며 연대를 추진했지만 대부분의 기성 정치인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장면 총리는 다음날인 6일에 "먼저 반공정신무장을 갖추자"는 제목의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18]

이 당시 민주당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상계』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상계』는 4월혁명 이후 재무장관으로 민주당 정권에 참여하게 된 김영선의 주재로 정책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19] 장준하는 장면 정부가 가장 열의를 쏟던 국토건설단 사업의 실질적 책임자를 맡을 정도로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20] 이로 인해 이 당시의 『사상계』는 "잡지사

18) 「일련의 대책검토」, 『경향신문』, 1961.5.7, p. 1.
19) 김삼웅, 『장준하 평전』, 시대의 창, 2009, p. 412.
20)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p. 80.

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라 정책 산실" 같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으니[21] 『사상계』가 정권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애초부터 『사상계』가 가지고 있던 냉전적 자유세계론은 탈냉전적 모색이나 중립론을 용인하지 않았다. 『사상계』 편집위원이었던 신상초가 A·A블럭이 태동하던 54년에 이미 아시아 제3세력론을 스탈린의 평화공세에 영합하는 이론에 불과하다고 공박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22] 『사상계』에 있어서는 민족적 주체성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 더 우선하는 과제였고, 그러므로 『사상계』의 통일담론이 경제 발전을 통해 자유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한 후 자립 경제를 이루어내겠다는 민주당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론과 궤를 같이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냉전적 자유세계론에 균열을 내는 통일담론을 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이 중립화통일론과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강하게 비판했고 "구정권에 반대하는 자는 모두 좌익시 되었던 까닭에 이제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 일시에 「금제」가 풀리자 일부 학생들은 간편한 논리적 추리로서 「해금」된 모든 것은 선이라고 믿는" 것이라며 중립화통일론을 "육·이오의 쓰라린 경험을 모르고 자란 세대의 몰현실성"으로 치부하거나,[23] 국토개발계획이나 신생활운동으로 돌아가 경제 건설에 힘쓰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지라고 훈계하기도 했다.[24] 급기야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21) 장준하,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pp. 32-33.
22) 신상초, 「'아시아적 제3세력론' 비판」, 『사상계』, 1954년 2월호, pp. 43-52.
23) 조가경, 「혁명주체의 정신적 혼미 : 주체성 확립의 목표는 적극적 자유와 경제부강」, 『사상계』, 1961년 4월호, p. 75.
24) 현승종,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 『사상계』, 1961년 4월호, pp. 125-131.

보면 학생운동의 행동적인 방향은 있어서 아니된다"며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25]

유창민은 이 시기 『사상계』에 드러났던 대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언설을 포착하여 그것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26] 그런데 이 당시 『사상계』 지식인과 대학생의 투쟁이 단순한 알력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기성세대가 대학생을 일방적으로 이용했다고 여겨질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투쟁이 일어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요구된다.

이 투쟁은 통일운동과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구체적인 지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제도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상계』와 운동의 차원에서 통일담론을 추진해가던 대학생 사이의 갈등은 담론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 정치적 외연을 둘러싼 실제적 각축이기도 했다.

이 각축은 쿠데타로 인해 결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끝나버렸기에 지금에 와서 그 우열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담론이 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통해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 점에서는 학생들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성 정치인이나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중을 매료할만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내놓지 못했다. 4월혁명 이후 통일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냉전적 자유세계론과 반공통일론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거리를 두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강조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립주의를 자유와 민권 수호의 위험 요소로 여겼던 『사상계』 지식인들은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반공을 국시로 해 온 자유민

25) 김성식,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과 방향」, 『사상계』, 1961년 1월호, p. 239.
26) 유창민, 앞의 논문, p. 165.

주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 자체에 의문을 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물론 그들의 판단대로 중립화통일론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은 통일담론과 민주주의·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수용은 혁명 이후의 사회가 요청하던 변혁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주었다. 학생운동세력은 통일을 주요한 화두로 만듦으로써 담론형성 주체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통일운동은 기성세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던 계몽운동들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시도될 수 있는 정치적 외연의 최대치에 근접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컸다.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넘어 논의 자체를 학생들의 무지의 소산 혹은 소영웅심의 발로로 폄하했던 일부 기성세대의 태도는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가진 파급력에 대해 그들이 느낀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혁명 이후 약 1년의 시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마련한 표상에 갇히지 않는, 실천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다. 『사상계』는 혁명 당시 찬사를 보냈던 이들에게 이제는 날선 비판을 가하며 그들과 정치적 외연을 둘러싼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상계』는 기존에 가져왔던 담론적 태도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이후 다가올 본격적인 담론 지형의 변동을 예비하고 있던 시기로, 『사상계』는 학생 운동 세력과의 쟁투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4. 투쟁적 주체로의 변모와 좌절이라는 언어

군사정권의 등장은 담론 지형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으나

초기에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사상계』는 민정이양의 약속을 믿고 쿠데타를 환영했는데, 당시 지식인들이 경도되어있던 제3세계 근대화론은 군정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대표적인 미국의 근대화론자 로스토우는 제3세계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군부와 지식인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덕분에 지식인들은 자립 경제와 균형성장을 통해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초기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었다.[27] 더불어 당시 후진국 담론의 주류는 선진국의 방식이 아닌 한국적 해결방안을 찾자는 데로 기울어 있었고, 『사상계』 지식인들에게도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나 산업화의 요구를 상회하거나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기에 군정의 민족주의 강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28]

학생들의 경우 주도적으로 전개해 온 계몽운동이 재건국민운동으로 대체되면서 주체적 의지가 소멸했고, 또 통일운동은 좌절되었지만 타율에 의해서라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안정감을 느꼈다.[29] 한편, 이미 4월혁명과 통일운동을 통해 민족주의를 학습했던 학생들은 63년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구호에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통일운동 당시에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민족주의를 전면화시킨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젊은 세대에게는 새롭고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이다.[30]

---

27)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 '민족혁명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15권 제1호, 2011, p. 49.

28) 이상록, 앞의 논문, p. 236.

29) 박대현, 「청년문화론에서의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권, 2012, pp. 426-428.

30)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제16권,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하게 되면서 군사정권과 『사상계』 지식인, 그리고 학생들의 민족주의는 분화하기 시작한다.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하고자 했으나 『사상계』 지식인들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우려했다. 우려는 경제 영역을 넘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밀려들어올 왜색 문화에 대한 것으로까지 번져갔고, 이것은 '신식민지' 한국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신식민지화의 위기감은 반제 민족주의를 다시 전면으로 불러냈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담론은 경제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저항적 차원으로 중심을 이동"하게 되었다.[31] 통일운동 때부터 반봉건, 반외세, 반매판의 민족주의 노선을 고수했던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장준하는 63년 8월호에 「치욕의 거사를 또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권두언을 통해 민족적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정권을 향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상계』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론장'에서 '대항공론장'으로 그 역할의 질적인 전환을 꾀하게 된다.[32] 그리고 이때 『사상계』가 택한 대항의 방식은 보다 실천적인 것이었다. 『사상계』 편집위원을 지냈던 노종호가 63년을 기점으로 『사상계』가 정치평론적 성격으로부터 정치투쟁적 성격으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33] 11월 5일 장준하가 고려대에서 민족주의 논쟁을 벌이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 공식적으

2007, p. 303.

31) 장규식, 「1950~1970년대 '사상계' 지식인의 분단인식과 민족주의론의 궤적」,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167호, 2014, p. 315.

32) 장세진, 앞의 논문, p. 49.

33) 노종호, 「나에게 사상계가 의미하는 것」,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장준화와 광복 50주년』,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사업회, 1995, pp. 212-213.

로 나선 것도, 64년 3월 24일 함석헌과 함께 연세대에서 대일외교 반대강연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기폭제가 된 3·24로 이끌었던 것도 그러한 전략 변화의 일환이었다.

『사상계』의 지면 위에서도 투쟁은 이어졌다. 4월 1일 발행된 긴급증간호 「한일회담의 제문제」에는 각 분야 전문가의 논설과 논문뿐만 아니라 선언문, 좌담회, 대담, 르포, 앙케이트 등 다양한 자료가 실려 반대운동의 이론적 지침서로 역할 했다.[34] 실제로 당시 학생 시위의 많은 구호가 『사상계』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 시기 『사상계』 지식인들과 학생운동 세력은 "이념적 공조관계"[35]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은 『사상계』를 통해 한일회담 반대의 명분을 체계화하는 한편, 『사상계』는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에 자극받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사상계』 지식인들이 학생들을 훈육과 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그들을 함께 운동을 실천하는 동지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이 당시 『사상계』와 학생운동 세력은 외부적 압력 때문에라도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억압할 목적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과 학원보호법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언론과 학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 검열을 제도화·합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생운동의 배후로 언론을 지목한 정권은 양쪽 모두를 고립시켜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을 고안한 것이었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두 집단 사이의 연대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36] 이러한 상황은 1965년 10월 정치교수 파동 때 다시 한번

34) 김려실, 앞의 논문, 2015, p. 183.

35) 이상록, 앞의 논문, p. 108.

36) 「학원의 보호냐, 학원의 위기냐?」, 「위기·위기의 연속 : 장차 어쩌자는 건가?」(『사상계』, 1964년 10월호)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치는 공개장」

반복되었고, 이 일로 편집위원을 해체한 『사상계』와 의식 있는 스승을 잃은 학생들은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해를 넘겨 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운동의 단계로 접어든 『사상계』의 지면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몇 가지 언설의 변화가 눈에 띈다. 우선 4월혁명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과거 제2공화국 당시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는 주도력 있게 정치를 이끌고 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그들에게 붙은 '무능함'이라는 딱지는 5·16세력에게 정변의 정당성이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돌이켜보았을 때 변혁을 이루기에는 집권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회오와 함께 과단성 없는 태도는 국민이 스스로 자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진정한 민주적 자세로 재평가되었다. 또한, "독재정권에게나 다름없는 매서운 규탄과 고발"을 일삼고, "그나마도 가져보려고 했던 민주적인 정치운용에 대한 한 가닥의 성의에 대해서마저 가차 없는 매질"을 가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37]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이 제안했던 중립화통일론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으나 "지식인들의 사회의식에서 갖가지 '타부'가 제거됨으로써 현존하는 권력이나 질서(또는 질서의 결여)를 넘어서 나라와 겨레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해보려는 마음의 표현"[38]이었다며 그 의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7·29 총선에서 혁신계가 전멸한 것을 보면 국민들의 판단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장이욱, 『사상계』, 1965년 1월호)은 모두 두 법을 함께 묶어 이야기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중대한 위기로 판단하였다.

37) 길현모, 「사월과 오월과 유월 : 지성이 혼선되어 있는 오늘을 분석한다」, 『사상계』, 1965년 6월호, pp. 30-31.

38) 김진만, 「해방이십년기념씨리즈 ⑤·지식인의 사회의식 : 금제에서 사회개혁으로 성장하는 지성」, 『사상계』, 1965년 5월호, p. 81.

며 "주권자의 자각이 그만큼 높다면 한편에 자유를 구가하다가 탈선하는 자가 있어도 반드시 국가의 운명을 위험시까지 할 필요는"[39] 없었다며 당시 통일담론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반성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온다. 4월혁명 직후의 무질서에 대한 불관용과 조급한 판단에서 나온 '4·19 좌절론'이 결과적으로 5·16을 낳았다는 성찰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40]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동시에 현재에 대한 재인식도 이루어졌다. 태생부터 미군정과 가까웠던 『사상계』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서 냉전적 자유세계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실질적 배후는 일본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 따라서 한일교섭의 합리적 타결을 위해서는 한미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언제나 일본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자각한 이후 『사상계』는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65년 9월호에 「미국의 대한정책 비판」 특집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한일협정을 서두르는 목적이 한국의 주권과 경제자립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유세계의 안정을 꾀하려는 데 있음을 알게 되자 자유세계론 자체에 거리를 두는 한편, 서구 지향의 예속적 근대화로부터 저항적 민족주의를 토대로 한 자주적 근대화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학생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65년 5월 19일 방미 중인 박정희와 린든 존슨 미대통령이 2차 회담을 갖고 난 후 미국이 가조인된 한일협정을 환영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곧 학생 시위에 "한미행정협정 체결에 있어서 호혜평등 관철

39) 박운대, 「민주당정권의 공과 : 그 집권 구 개월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상계』, 1965년 5월호. p. 73.

40) 60년대 중반 중립화통일론이 다시 논의된 데에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중공 승인 및 인도차이나의 중립화 제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보드래, 앞의 논문, 2012, pp. 289-290.)

하라", "Yankee keep silent" 등의 구호가 추가되었다.[41] 『사상계』에 실린 워싱톤 데일리지와 타임지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항의문에서도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다. 美언론이 한국의 학생 데모가 좌익에 선동된 것이라 주장하자 이에 단식 중에 있던 이화여대생들이 직접 반박했는데, 그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이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한국을 이용해 이권을 챙긴 일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역사의 오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는 부분이다.[42] 일찍이 자주 통일을 목표로 한 통일운동을 전개한 바 있던 대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한일협정이라는 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60년대 중반 『사상계』와 대학생은 이처럼 연대적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사상계』는 대학생의 모습을 재현·표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캠퍼스 동정」 같은 코너를 통해 실제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직접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사상계』의 대학생에 대한 그런 관심은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더 이상 운동이 지속될 수 없게 된 순간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사상계』가 조명한 이 시기 학원가의 풍경에는 청춘의 낭만과 열정은 온 데 간 데 없고, 대신 학원 밖의 시위가 끝났음에도 학원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학원 내 탄압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한 학생은 "너무도 큰 기대가 무참히 좌절된 후에 오는 자조와 영탄의 회오리가 대학가를 휩쓸고 있다"고 토로했고,[43] 또 다른 학생은 감방에서 돌아온 후 목격한 너무나 변함없는 교정의 모습

41) 6·3동지회,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p. 136.
42)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일동, 「지식인의 함성 : 종교인·문학인·교수의 비준반대성명」, 『사상계』, 1965년 7월 긴급증간호, p. 161.
43) 송재소 외, 「대학의 캠퍼스는 『유리동물원』인가?」, 『사상계』, 1966년 8월호, p. 268.

에 조용한 분노를 터트렸지만 곧 이어 체념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악을 향해 내던지던 돌덩이와 함께 용기까지 던져버린 것만 같다"며 스스로를 '늙은 젊은이'로 지칭했다.[44]

이것은 김승옥이 「서울, 1964년 겨울」에서 그려낸 '안'과 '김'의 고백과 무척 닮아있다. 한 차례의 계엄령이 지나가고 얼어붙은 서울의 거리에서 '꿈틀거림'의 진의에 가닿지 못한 채 무의미한 것들을 나열하며 시간을 보내던 이제 겨우 스물다섯의 젊은이들은 헤어지며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45]라고 자문한다. 김승옥은 이 작품으로 사상계사(社) 주관의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뒤 "우리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의 언어, 어떤 포즈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내가 반응한다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 타인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46]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월혁명 이전 대학생들의 좌절과 방황을 비판했던 『사상계』는 함께 싸우고, 그 패배의 대가까지 함께 짊어지게 된 이들을 더 이상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좌절까지도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사상계』, 그 너머의 미래

4월혁명 10주년 기념호에 실린 신상웅의 「불타는 도시」에서

44) 고경숙 외, 「학생의 달 · 대학생수필 · 지성의 광장에 낙엽지다」, 『사상계』, 1966년 11월호, p. 148.
45)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사상계』, 1966년 1월호, p. 427.
46) 김승옥, 『뜬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p. 152.

그리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60년대 초반에 나온 작품들의 그것과는 여실히 달라져 있다. 거리를 노도와 같이 휩쓸던 학생들은 사라지고 그들은 쫓기고 몰려 산으로 올라간다. 천에 달하던 일행들은 흩어지고 흩어져 수십에 불과하게 되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 받던 그들은 산속에서 발견한 작은 건물에 의탁하여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다음날 눈을 떠 보니 그곳은 수도경비대의 초소였다. 기성세대를 호령했던 혁명 전사는 사라지고, 그곳에 남은 것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고 미숙한 대학생들이었다.

대표적인 4·19세대 작가의 냉혹한 자기 인식에 의해 재현된 그날은 사실 10년 전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현재로 보인다. 정권의 반민주성에 항의하기 위한 수차례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권의 탄압은 더 폭압적으로 변해갔고, 총에 맞서는 학생 전사라는 말은 수사로도 불가능한 것이 되어갔다. 그러한 현실은 『사상계』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박정희의 번의를 비판하며 군정종식을 촉구하는 글들을 게재한 63년 4월부터 세무사찰과 반품공작 등 정권의 방해공작으로 고통 받던 『사상계』는 66년에 이르러 '빈사상태'에 빠져들었다. 독재정권의 탄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졌고, 정치교수 파동 이후 지식인들은 『사상계』에 글쓰기를 주저했다. 66년 정월부터 67년 12월까지 만 2년 동안은 50쪽 안팎으로 줄어든 분량의 잡지를 납본용과 정기구독자에게 보낼 것만 겨우 찍어냈다. 『사상계』의 '사실상의 종말'이 1966년이었다는 진단[47]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1968년 판권을 넘겨받은 부완혁은 새로운 의지를 다지며 난관을 헤쳐 가고자 했고 잡지도 증면 복구되었다. 여전히 4월혁명을 기렸고, 69년 정부여당의 삼선개헌 시도에 강하게 맞섰다. 학생들

47) 김건우, 앞의 책, pp. 89-90.

과의 연대도 계속되었다. 『사상계』는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로의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고 시위나 데모 같은 비상시적 방법이 상시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6·3항쟁 때까지만 해도 저어하는 입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삼선개헌 반대투쟁 때는 정권의 반민주성이 극에 달해 학생시위를 저지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학생들의 데모와 시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했다.[48] 그리하여 몇몇 매체들이 학생 운동 관련 기사를 은폐했던 반면, 사상계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앞장섰다.[49] 그러나 더욱 강력해진 경찰의 무기, 그리고 정권의 언론 탄압 속에서 맺어진 『사상계』와 대학생의 연대는 고독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상계』와 대학생 세력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사상계』를 통해서만 당시 대학생의 학생운동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며 학생 운동은 이론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변화·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사상계』에는 그러한 모습이 잘 담기지 않았다. 『사상계』를 통해 재현되는 학생들의 시위·데모 현장은 학교를 뛰쳐나온 학생들이 거리를 점령하며 행진을 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으로 이것은 4월혁명 당시의 이미지를 반복 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은 단식을 하거나 장례식·화형식·가장행렬·모의재판과 같은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운동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었다. 특히나 정치풍자적 연행들은 60년대에 보편화 된 대학축제에서

48) 모든 『사상계』 지식인들이 학생 시위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함석헌의 경우 6·3항쟁이 전국민적 운동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학생 시위가 평화적·비폭력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김려실, 앞의 논문, 2015, p. 19.)

49) 『사상계』는 모든 신문에서 외면했던 삼선개헌 반대 각대학 선언문을 자료로 모아 게재하기도 했다.(「각대학 학생 선언문」, 『사상계』, 사상계사, 1969년 8월호, pp. 139-158.)

온 것[50]으로 과거 학도호국단 활동이나 관제데모 경험으로부터 운동의 방식을 학습했다는 한계[51]를 극복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였다.

또 한 가지 『사상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은 4월혁명 이후 통일운동, 6·3항쟁 등을 거치며 학생운동세력이 종적·횡적으로 분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 사건을 거치며 학생들은 각각의 이론적 토대에 따라 다른 주장을 가지기 시작했고, 나아가 4월혁명과 6·3항쟁의 짧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의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6·3항쟁 당시의 학생들은 4월혁명 정신의 계승을 표방하면서도 자신들을 선배들과 구분했는데,[52] 김국태의 「물 머금은 별」에는 6·3세대인 아우가 4·19세대인 형에게 "형들이 열정적이었고 어쩌면 이상주의적이었다면 우리는 이지적이고 현실적"[53]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두 세대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4월혁명만큼이나 그 주도 학생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외에는 구체적인 이념적 지향이 없었던 반면, 6·3혁명의 주도 세력은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성숙기에 접어든 대학의 이념써클들을 통해 이론적·이념적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었다.[54] 이들이 '6·3세대'로 명명되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었지만, 사상적 토대나 행위 양식에 있어서 이들은 4·19세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해가며 1970-80년대로 이어질 저

50) 오제연, 「1960년대 한국 대학축제의 정치풍자와 학생운동」, 수선사학회, 『사림』 제55집, 2016, pp. 377-378.

51) 김미란, 앞의 논문, 2010, pp. 28-29.

52) 오제연, 「6·3항쟁의 전개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p. 386.

53) 김국태, 「물 머금은 별」, 『현대문학』, 1970년 7월호, p. 163.

54) 이들은 생활상의 내핍을 강조하는 데 그친 선배들과 달리 세계적 스펙트럼에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를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지향을 지닌 존재로 성장하였다.(장세진, 앞의 논문, p. 60.)

항적 운동 세력의 원형을 이루게 된다.

학생운동은 70년대 이후까지도 이어지며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과 변화, 그리고 분화를 이룬다. 그러나 『사상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다 「오적」 필화 사건으로 갑작스러운 정간을 맞은 사상계의 마지막은 「불타는 도시」에서의 한 학생의 죽음과 겹쳐진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2년간 청강을 하며 대학생 행세를 해온 그는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도망치다가 군인의 총에 맞아 조수석에 꼬꾸라져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의 죽음에서 과거 혁명 전사의 희생 위에 드리워지던 영웅적 휘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대신 떠오르는 햇살이 따스하게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허황된 희망 대신 그럼에도 어제가 오늘로, 그리고 내일로 이어질 것임을 약속한다.

창간에서 정간까지 18년의 세월 동안 『사상계』는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것은 담론적 차원에서의 변모이기도 했고, 실천적 투쟁 주체로의 변신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대학생이 일방적인 호명의 대상에서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과도 겹쳐진다. 그런 시간이 축적되어 혁명 직후 "학생은 혁명의 주체 세력이 아니다"는 말로 쉽게 배제되었던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로 기저집단세력으로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55] '낮은 목소리'이긴 하나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함으로써 새로운 자유주의적 지식인이 등장했음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56] 『사

---

55) 1960년 4월의 그날을 회상하는 이 글의 필자 이돈녕은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대학생 중 한 명(당시 서울대 문리대 재학)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이돈녕, 「사월혁명 그날을 회고함」, 『사상계』, 1970년 4월호, p. 25.)

56) 김건우는 김승옥, 이청준, 김현, 김병익과 같이 10대 후반 실존주의의 세례를 받았고, 자유주의를 정치적 저항의 거점으로 여기며 성장한 문학인들을 근대화 인텔리겐차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지식인으로 평가한다.(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상계』가 강박적으로 4월을 소환하고, 대학생과 연대했던 시간들은 이러한 1970년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비록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새로운 혁명은 도래하고 있고, 그것을 추동할 미래 세대 역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에 『사상계』가 준비했던 미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사상계』, 『경향신문』, 『현대문학』
「대열속에서」, 「서울, 1964년 겨울」, 「물 머금은 별」

2. 논문

권보드래, 「4·19와 5·16, 자유와 빵의 토포스」,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0권, 2010, pp. 85-134.
권보드래, 「중립의 꿈 1945~1968 :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4집, 2012, pp. 261-314.
김건우, 「1964년의 담론 지형 :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2호, 2009, pp. 71-90.
김려실, 「『사상계』 지식인의 한일협정 인식과 반대운동의 논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54권, 2015, pp. 177-205.
김려실, 「화보로 읽는/보는 『사상계』 : 1960년대 『사상계』와 혁명의 망탈리테」,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57권, 2019, pp. 47-91.
김미란, 「'청년 세대'의 4월혁명과 저항 의례의 문화정치학」, 국제한국문학문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2호, 2009, p. 85.)

화학회, 『사이』 제9권, 2010, pp. 11-43.
김미란, 「'순수'한 청년들의 '평화' 시위와 오염된 정치 공간의 정화 : 4월혁명기에 선호된 어휘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1권, 2011, pp. 173-209.
박대현, 「청년문화론에서의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권, 2012, pp. 419-444.
오제연, 「1960~1971년 대학 학생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오제연, 「6·3항쟁의 전개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pp. 365-411.
오제연,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민족주의 분화 : "민족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제16권, 2007, pp. 285-323.
오제연,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제22호, 2010, pp. 142-175.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 '민족혁명론'과 '민족적 민주주의' 사이에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15권 제1호, 2011, pp. 35-76.
오제연, 「1960년대 한국 대학축제의 정치풍자와 학생운동」, 수선사학회, 『사림』 제55집, 2016, pp. 363-401.
유창민,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대학생 표상 : 『사상계』의 대학생 담론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회, 『겨레어문학』 제47호, 2011, pp. 143-171.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장규식, 「1950~1970년대 '사상계' 지식인의 분단인식과 민족주의론의 궤적」,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167호, 2014, pp. 289-339.
장세진, 「'시민'의 텔로스(telos)와 1960년대 중반 『사상계』의 변전 : 6·3 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제38호, 2013, pp. 48-84.
조대엽, 「4월 혁명의 순환구조와 6·3 항쟁 : 역사주기론의 시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2호, 2010, pp. 1-36.

3. 단행본

6·3 동지회, 『6·3 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김상웅, 『장준하 평전』, 시대의 창, 2009.
김승옥, 『뜬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4.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장준화와 광복 50주년』,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사업회, 1995.

(**투고일**: 2020. 2. 16 **심사완료일**: 2020. 3. 18 **게재확정일**: 2020. 3. 20)

이시성
소 속: 부산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인문대교수연구동 106호
전자우편: yisisung@naver.com

[Abstract]

Changes in Discourse in the『Sasang-gye』of the 1960s through the Discourse of College Students

Lee, Si-seong

In the '60s,『Sasang-gye』formed a knowledge field and produced a variety of discourse. Among them, the discourse of university student created a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 greatly influenced their growth as a new social entity. But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Sasang-gye』and university students throughout the '60s, we can find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just a one-sided relationship, but also progresses toward mutual negoti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in this paper, I focused on how the dis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in『Sasang-gye』had changed. The change in the discourse of university students in『Sasang-gye』had been made at the request of the times. Therefore, this work will be an opportunity to examine what discourse『Sasang-gye』has produced in response to events such as the April Revolution, movement for unification in the second republic, and the June 3 uprising. And this will show whether『Sasang-gye』had moved on to a level of practice that is not just about discourse production.

Key words: Sasang-gye, University student discourse, Student movement, The April Revolution, Unification movement, Permanent Neutralization, The June 3 uprising, Nationalistic Democracy.